

〈제 64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추석 명절 맞아 지역 향토부대 위문 방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향토부대인 제31보병사단(사단장 최순건)을 방문해 1천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방호와 대민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위문 방문한 광주은행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광주은행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제31보병사단을 위문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 추석맞이 '이웃사랑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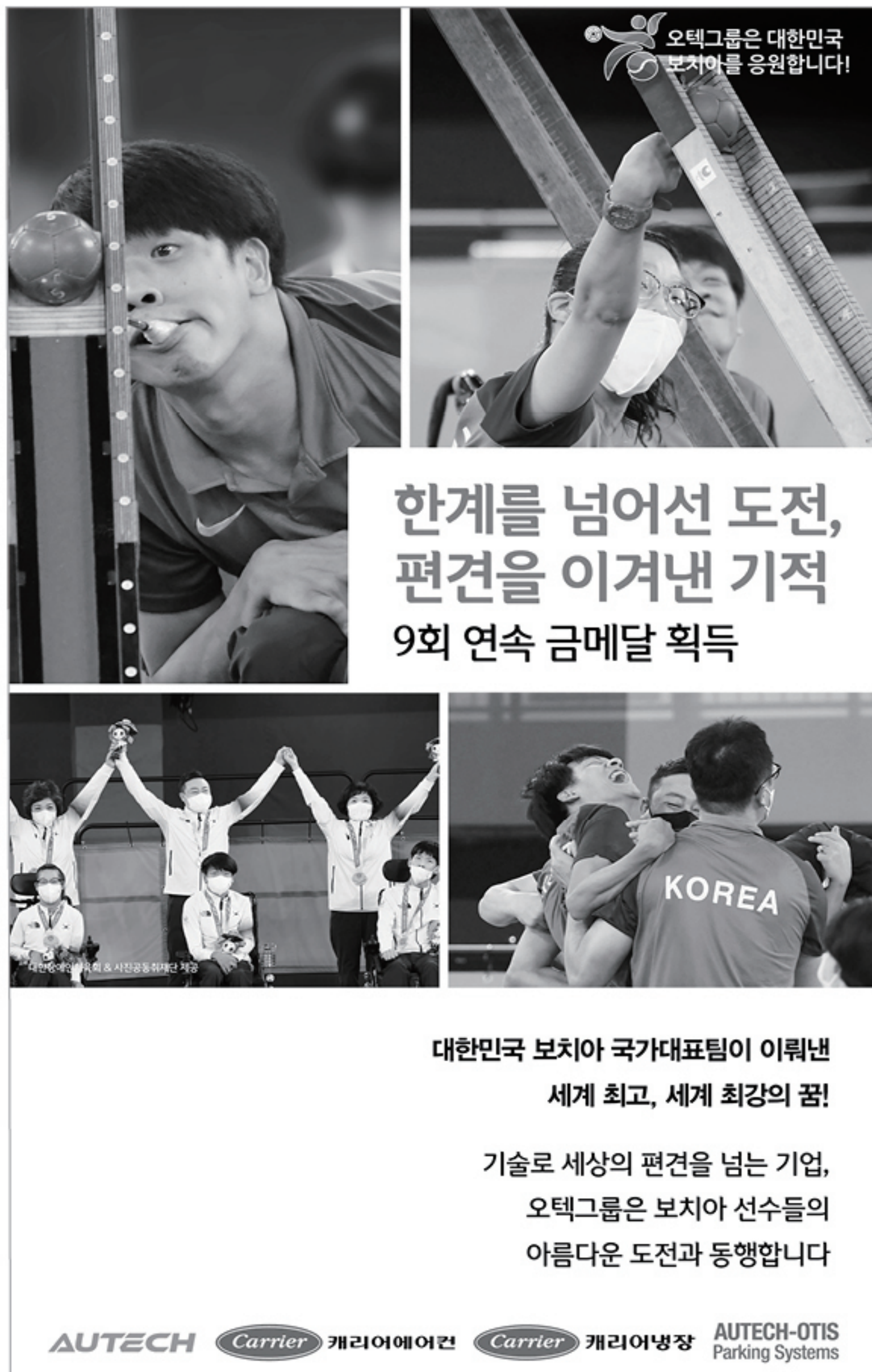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웃사랑 캠페인'은 지난 2002년 시작된 사회 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9천8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해 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230명에게 전달될 1천2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준비했으며 해당 물품은 광산구청을 비롯해 광산구 어룡동 주민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평택시 포승면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텍캐리어

◆ 오텍그룹 후원 보치아 국가대표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 획득



오텍그룹(회장 강성희)이 후원하고 있는 보치아 국가대표팀이 이번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패럴림픽 9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보치아(boccia)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 표적구에 상대방보다 가장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오텍그룹 강성희 회장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장애인보치아의 발전을 위한 역할과 오텍그룹의 사회공헌활동 기여를 인정받아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보치아 국가대표팀'을 2009년부터 13년째 후원해 오고 있다.

호반건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95점 이상)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 이행하고 공정위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평소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차 ‘캐스퍼’ 양산 환영>

-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5일, 광주형일자리로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신차 ‘캐스퍼’의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국내에 23년 만에 지어진 완성차 공장으로 수많은 우려와 난관을 극복하고 공장착공 1년 9개월 만에 신차생산을 하게 되는 모두가 놀랄만한 역사를 이루어 냈다.

더욱이 온라인 판매 사전예약 첫날에만 올해 생산물량 목표를 초과하였다는 소식에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지역민 모두가 갖게 되어 더욱 고무적이다.

이번 신차양산을 계기로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가 확산되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김봉길 회장은 “광주글로벌 모터스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광주형일자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품질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광주경충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II. 광주경충 소식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제5차 운영협의회〉



본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제5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협의회는 노사민정 개별주체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협의체로,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2022년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안) 및

신규 고용·노동관련 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장년센터 제32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8일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32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직자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피플앤아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11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중장년센터 제4회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9일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4회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몰렉스 업체 재직(퇴직예정)자에게 성공적인 전직 및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16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9.6 ~ 9.10)

9.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개정지침 비대면 설명회 	9.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 노사민정 이행점검
9.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센터 제32회 생애경력설계 재직자과정 운영 ● 여성창업지원 심사 ● 제5차 노사민정 운영협의회 개최 	9.1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28회 금요조찬포럼

〈제1528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반기성(한국기상협회 이사장) 주제: 기후위기와 경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9월1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반기성 한국기상협회 이사장을 초청 <기후위기와 경제>란 주제로 제1528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제는 기후변화라 얘기하지 않고 기후위기라고 한다. 기후는 먼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문명, 전쟁, 전염병 등으로 결국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의 코로나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에 엄청난 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제일 심각한 게 사실은 식량감산이다. 두 번째는 대형 산불, 세 번째가 전염병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자연 재난에서 제일 피해가 컸던 게 카트리나다. 앞으로는 이런 슈퍼 태풍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계속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이다.

2050년에는 제일 무서운 것이 가뭄이라고 한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불안정 지역의 공통점은 사막화 지역이다. 물 문제가 심각해진다. 현재도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물 분쟁이 심각하다. 극한 폭염, 극한 홍수, 극한 대형 산불은 전부 다 빙하가 녹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기후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기후학자들은 기후이탈이 일어나면 이제는 인류가 지구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경고한다.

2020다보스포럼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제일 위협하는 요인이 1번 기후변화, 2번 기후 변화 대응 실패, 3번 자연재해, 4번이 생물 다양성 상실, 5번째가 인위적인 환경재해라고 했다. 기후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탄소감축기술이라고 생각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약자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사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아무 자원도 없다. RE100 결국에 어디서든지 싫든 좋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



1. 노사 동향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 개최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사노위 산하 근로면위는 9. 7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사례 발제 및 향후 근로면위 일정 논의
 - 금번 회의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
 - ※ 일본 사례 발제자 : 이정 교수 (한국외대 법전문)
 - 영국 사례 발제자 : 이정희 본부장(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이정 교수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재직전임자(노조전임자)만이 존재하고, 재직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노동조합법 제2조 단서 제2호) 및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설명
 - 이정희 본부장은 영국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 대표(union representatives)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아닌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 업무(union duties)에 대해서만 합당한 수준(reasonable)내에서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설명
 - ※ 반면 집행위, 대의원대회 등 노조 활동(union activities)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산업 안전 예방 노력 지속

- 고용부는 9. 8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고 발표
 - ※ 고용부는 2021. 7. 14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점검 실시
 - ※ 3대 안전조치 : ① 추락사고 예방조치, ② 끼임사고 예방조치, ③ 개인보호구 착용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금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분야에 집중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3대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에 대해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 발표
- 한편, 고용부가 8. 30 ~ 10. 31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3대 안전조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산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양 노총은 내년 대선 대응 활동 본격화

- 노동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세력 결집방안 마련에 집중
-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2022 대선 공동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9. 7)
 - ※ 참여 진보정당 :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 공동대응기구는 기존 양당 위주의 세력구도 타파를 위해 친노동 정치세력 결집을 모색하고 있으며 내년 대선에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주요 이슈로 삼는다는 방침
 - 또한,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10. 20 총파업, 11. 13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해 친노동 정치세력 결집에 주력한다는 방침
- 한편, 한국노총은 9. 14「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대선외제 선정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

■ 금융산업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노조는 정치권을 활용한 현안 해결 주력

- 금융산업 노사간 중앙교섭이 결렬(7. 13)된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9. 3 ‘2021년 금융노조 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금융노사간 교섭은 금융노조가 임금 총액 기준 정규직 4.3% 인상 및 저임금 직군 8.6%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총액 기준 0.9% 인상 입장을 유지

- 금융노조는 동 기자회견에서 ▲점포폐쇄 중단을 위한 금융산업별일자리위원회 신설, ▲중식시간 동시사용, ▲지주회사 및 정부로부터 자율교섭 보장 등을 요구

- 금융노조는 9. 10 산별임단투 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 8. 24부터 중식시간 동시사용 태업투쟁, 9월말 또는 10월초에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0,151명 중 66,045명 투표 결과 64,075명 찬성(92.47%)

※ 중앙노동위원회는 8. 2 조정중지를 결정

2. 법제 동향

■ 김상희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1)

- (발의 이유)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에 의해 정해지는 등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
- (주요 내용)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중 휴가 사항에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박주민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1)

- (발의 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주요 내용) 누구든지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박주민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2)

- (발의 이유) 사용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 존재
- (주요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토록 규정

■ 안호영 의원(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2)

- (발의 이유) 현행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는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 등의 불이익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는 등 차별 여부 자체를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또한 기간제근로자 등이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차별 여부 판단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과 달리 채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차별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

○ (주요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채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 확대

- 또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채우의 원인이 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개선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노동위원회가 차별 판단 시 ‘업무의 종류와 성격, 채우의 내용, 성질 등을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 안호영 의원(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2)

○ (발의 이유)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채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는바, 사업 내에 이러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차별 여부 자체를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주요 내용)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채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 확대

■ 양금희 의원(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3)

III. 노사 및 법제동향

- (발의 이유)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 지원

■ 이수진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6)

- (발의 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필요
- (주요 내용)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 가능토록 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강은미 의원(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6)

- (발의 이유) 국제사회에서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근로자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법률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토록 규정
 -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

■ 윤건영 의원(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 7)

- (발의 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Ⅲ. 노사 및 법제동향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 발생

- (주요 내용) 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